

■ 한화갑 의원직 상실후 민주당 진로는?

정계개편 주도권 타격... 내분 불가피

대법원이 한화갑 대표에 대해 유죄를 확정 판결함에 따라 민주당은 선장을 잃게 됐다. 한 대표의 의원직 상실은 당장 민주당의 진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결과적으로 정계개편의 흐름을 가속화 시킨다는 점에서 정치권은 물론 지역민들의 지대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비대위 구성이나 전당대회나

◇민주당 진로=한 대표가 대법원의 유죄 확정판결로 대표직을 유지할 수 없게 됨에 따라 민주당은 당분간 비상대책위 구성과 전당대회 개최 문제 등을 둘러싸고 당내 갈등이 예상되고 있다. 현역 의원들은 전당대회를 개최할 경우 당권 경쟁 등으로 인한 당내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고 정계개편에 보

다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비대위 구성이 절실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반해 지역위원장 등 원의 인사들은 비대위 구성 주장은 현역의원들의 입지 강화용이라며 당헌·당규에 따라 전당대회를 개최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 한 대표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 이후 간부들과의 인사 자리에서 "장상 대표를 중심으로 당헌·당규에 따라 민주당의 진로를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 당내 분위기는 전당대회 개최 쪽으로 무게추가 기울고 있다. 그러나 일부 현역 의원들은 비대위원장에 장상 대표를 선임하면 된다는 입장까지 나타내며 비대위 구성을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어 민주당 내부의 갈등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친 고건과 '통합신당' 속도낼 듯

◇정계개편 영향=정치권은 대법원이 한화갑 대표에 대해 유죄 확정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 말을 아끼면서도 정계개편의 진원지가 민주당이 될 수도 있다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민주당의 권력 구조상 현역 의원들이 당을 장악할 수 없다는 점에서 선장을

잃은 민주당은 상당한 내분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전당대회 개최 등을 둘러싸고 민주당 내부 갈등이 심화될 경우, 친 고건계로 분류되는 일부 의원들의 집단 행동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는 성급한 관측을 내놓고 있다.

열린우리당의 내분과 민주당의 갈등, 여기에 지지를 정제로 인한 고건 전 총리의 초조함이 겹쳐 정계개편의 대폭발이 조기에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일시국회도 폐회와 더불어 열린당, 민주당, 고건 전 총리를 중심으로 한 삼각축이 어우러지면 정계개편의 흐름은 더욱 빨라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당내싸움 지속뎀 지역민심 상실

◇지역 정치권 반향=한 대표의 의원직 상실은 광주·전남의 정치 구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민주당은 한 대표 재판 결과는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점에서 지역 여론에 동정론이 확산, 광주·전남지역 등 호남에서의 민주당세가 오히려 강해질 것이라는 기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통합신당 창당을 원하는 지역 여론은 한 대표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 당장 반응을 보이지 보다는 민주당의 행보를 주시할 것이라는 전망이 더 유력하다. 민주당이 내분을 거듭한다면 지역민심은 곧바로 통합신당을 주도하는 쪽으로 쏠릴 것이라는 관측이다.

또 한화갑 인사로 구성된 광주·전남지역 운영위원장들의 역할은 상당 부분 위축될 전망이다 박주선 전 의원 등 그동안 비주류로 분류됐던 인사들의 행보가 주목받을 전망이다. 한편 한 대표의 의원직 상실로 내년 4월 이뤄질 전망인 무안·신안 국회의원 보궐 선거에 출마 가능성이 있는 인사들의 이름도 벌써부터 거론되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광주지역 11월 수출 사상 첫 10억불 돌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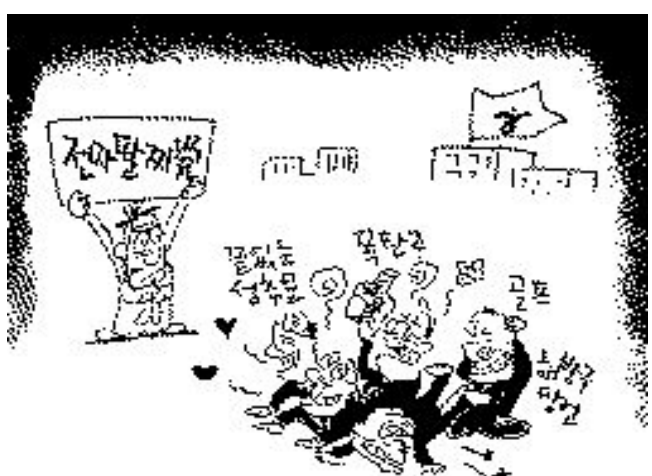
광주지역 11월 수출이 사상 처음으로 월간수출 10억 달러를 돌파했다. 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지부(지부장 고영만)가 22일 발표한 '광주·전남지역 무역동향'에 따르면 광주·전남의 11월 수출은 전년 동기보다 16.0% 증가한 26억3천500만 달러를 기록했다. 광주의 11월 수출은 10억1천5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52.3% 증가했으며 전국 16개 광역시·도 가운데 최고치를 보였다. 이는 승용차(127.8%), 집적회로반도체(71.3%), 병장고(49.7%) 등의 수출호조세 때문으로 풀이된다. 반면 전남도의 11월 수출은 16억2천만 달러로 전년 동월보다 0.8% 증가에 그쳤다. 제트유·경유 등 석유화학제품과 아연도강판이 48~86%의 큰 증가율을 보였으나, 선박이 72% 감소한 때문이다. 광주·전남의 수입증가율은 7.0%로 전국 증가율(12.2%)을 크게 밑돌았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지도자 언행 신중해야"

고건 전 총리 기용은 실패한 인사였다는 노무현 대통령 발언의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고 전 총리가 22일 서울 해화동 사무실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빛日만평 - 김중두



'판나라黨'이 싫으면 이견 어떨지?!

당정, '분양가 상한제' 내년 9월 실시

"재건축·재개발 아파트도 포함"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2일 공공택지에서 한 매조건부와 토지임대부 분양을 내년 중 시범실시하기로 합의했다. 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내년 9월부터 시행하고, 2004년 마련한 후분양 로드맵을 1년 연기해 2008년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낮 국회에서 강봉균 정책위의장과 권오규 경제부총리, 이용섭 건설교통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부동산특위 2차 회의에서 이 같이 합의했다고 박영선, 이인영 의원이 전했다. 당정은 내년부터 대한주택공사가 자체 보유한 한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한매조건부와 토지임대부 분양을 시범실시하며 시행 성과와 국민들의 선호도를 지켜보면서 공공택지 내 공

영개발지구를 점차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박영선 의원 등은 "시범실시 지역이나 공급 물량 등에 대해서는 확정된 얘기가 없었다"며 "궁극적으로는 공공택지의 전면 공영개발이라는 방향으로 가기 위한 시행확대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또 "분양가 상한제 실시의 정신에는 당연히 재건축·재개발 아파트도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당정은 분양가 상한제 등의 전면 시행에 따른 민간 건설업체의 충격을 완화한다는 취지에서 후분양 로드맵 실시시기를 1년 연기했다. 당정은 내주 중 부동산특위 3차 회의를 열어 분양가가 공개 범위 및 시기, 투기수요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제한, 종합부동산세의 목적세 전환 문제 등을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시설

노대통령의 '작심 발언' 앞날이 걱정이다

노무현 대통령의 지난 21일 민주평통 발언의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고 건 전 국무총리가 자신의 총리 기용을 '인사 실책'로 규정한 노 대통령을 정면 비난하고 나섰고 정치권도 소란스럽다. 예 비역 장성들의 모임인 성우회도 전시 작전통제권 논란과 관련, 긴급 회담단 회동을 갖고 반발하고 있다. 사분오열 된 국론이 이리 찢기고 저리 찢기고 있는 것이다. 노 대통령의 발언이 아무리 의도된 발언이라지만 도를 넘었다고 판단된다. '고 건 총리의 기용은 실패한 인사'라든가 '국방장관과 참모총장들이 작전통제권도 없이 별을 달고 거들먹거렸다' 등의 표현은 지나치다. '노무현이 하는 것을 반대하면 모두 정의'라거나 '난데없이 굴러들어온 놈, 흔들어라 이거지'라는 대목에선 할 말을 잃는다. 노 대통령으로서 10%대의 낮은 지

지율과 정치권 및 언론의 잇단 비판에 어울릴 수도 있을 것이다. 대통령의 '작심 발언' 곳곳에서도 좌절감과 냉담감, 분노가 묻어나고 있다. 하지만 스스로 선택하고 국민의 지지를 받아 당선된 최고국정운영자로서의 책임감은 엿볼 수 없어 안타깝다. 대통령이 발탁한 총리에 대해 '실패한 인사' 운운하고 그 총리가 하무도 못 돼 대통령을 비난하는 나라가 제 모습일 수는 없다. 더구나 대선 예비주자인 고 건 전 총리와 열린우리당의 통합신당파를 견제하기 위한 정치적 노림수가 있다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대통령이 특유의 오기와 독선으로 '남의 탓'만을 늘어놓아서는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 국민들은 먹고 살기에도 힘에 부친다. 임기 말에 접어들어 대통령이 국민통합에 힘쓰기보다 국론분열에 앞장서는 나라의 앞날이 걱정이다.

광주·전남 '빈곤 악순환' 고착화 되나

광주·전남지역이 빈곤, 노동, 교육, 의료, 주거 등 사회복지 5대 분야에서 여전히 전국 최하위권을 맴돌고 있어 '빈곤의 악순환'이 고착화하는 것 아닌지 우려된다. 참여저치 21이 작성한 '2006 사회양극화 실태보고서'에 따르면 광주·전남의 기초생활보장 수급률이 광주의 경우 3.8%로 7대 광역시 가운데 단연 낮았고, 전남은 4.1%로 13만명 정도가 가장 많았다. 전남의 기초생활보장 수급률 역시 전국 평균보다 배 이상 높은 6.7%로 16개 시·도 중 최고 수준이다. 광주·전남지역의 빈곤은 개선되지 보다는 지속화하는 경향을 나타내 '빈곤의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광주지역에서 10년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가구가 250가구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고, 전남은 5년 이상 수급자 가구가 4만9천316가구로 두 단위에서

오염이었다.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광주·전남의 기초생활수급자는 서울, 울산, 경기의 2~4배 수준이다. 빈곤층이 많다 보니 교육이나 의료, 주거 수준도 열악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는 광주·전남이 빈곤-저 교육-저생산-빈곤이라는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광주·전남의 빈곤은 산업화 과정에서 낙후된 지역경제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렇다고 언제까지 '가난 타령'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 '빈곤의 악순환' J 프로젝트를 같은 대규모 개발사업도 좋지만 기업유치를 통한 지역 일자리 창출이 더욱 시급하다. 이와 함께 빈곤층이 스스로 실질적인 자활을 이룰 수 있도록 지역차원의 관심과 배려도 있어야 할 것이다.

靑, 군복무 기간 단축 검토

내년 상반기... '18개월' 유력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22일 군복무 기간 단축을 관계부처에서 검토중이며,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정부안을 공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복무단축기간은 육군과 해병대 기준으로 지금보다 6개월을 줄여 18개월로 하자는 여론 일각의 주장이 수용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그러나 현재의 징병제를 지원자에 한하는 모병제로의 전환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이 관계자는 말했다. 정부의 군 복무기간 단축안이 확정될 경우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발표된다는 점에서 젊은 표심을 겨냥한 선심성 공약이라는

비판을 받을 소지가 있어 야당의 반발 등 정치적 파장이 예상된다. 이 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모병제 검토는 너무 이르며, 모병제를 제외하면 나머지 모든 부분은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하고 있다"며 "단 국방개혁 2020의 병력 수급과 맞아야 하는 만큼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군복무가 시간낭비가 아니라는 것을 느끼게 하면서 생애 총 근로시간이 늘어난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변화된 병역제도가 내년 상반기 중 공개되면 여론수렴과 정치권 협의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인턴보좌관제' 반대 촉구

시민단체협, 시장 등에 서한

광주시민단체협의회가 22일 인턴보좌관제를 반대하는 촉구문을 박광태 광주시장과 광주시의회에 각각 전달했다. 시민단체협의회는 박광태 시장에게 보낸 촉구문을 통해 "시장의 '부동의' 표명에도

불구하고 광주시의회는 지방자치법 118조를 위반하면서 지난 15일 인턴보좌관제 관련 예산을 통과시켰다"면서 "박 시장은 시의회가 불법적으로 통과시킨 예산안에 대해 수용하지 않아야 하며, 불법 예산안에 대해 '재의 요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광주시의회에 앞으로는 "법을 준수해야 할 지방의회가 해당 법령을 정면으로 거스른 만큼 지금까지도 인턴보좌관제를 자진 철회해야 한다"는 내용의 촉구문을 보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회장 許宰喆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禎業	논설실장 金東永	편집국장 申港樂
1952년 4월 20일 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00-500·222-811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내선	사회 2부 2200-619	총무부 2200-511	문화사업국 2200-541
(대표) FAX 222-4918	(F A X 227-0118)	(F A X 222-8005)	(F A X 222-0195)
편집부 2200-629	문화생활부 2200-626	광국국 2200-521	판매부 2200-551
정치부 2200-616	여론제작부 2200-628	(F A X 227-9500)	(F A X 227-9500)
경제부 2200-617	체육팀 2200-627	디자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사회1부 2200-618	사진부 2200-690	시업2부 2200-552	(F A X 02-773-9335)
(F A X 222-4267)	조사부 2200-570	※구독료 월정 5,000원 1부 4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